

#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공개 파문 與 전대서 뒷전 된 민생·경제 이슈

김 여사, 韓에 보낸 문자 5통 공개  
권성동 “진실공방 아닌 韓 사과 필요”  
장동혁, 친윤계·원희룡 캠프 저격  
오세훈 “대표 후보들, 정도 지켜야”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참 상하셨을 것 같고 생각합니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하급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부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산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

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나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 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野, 사망 1주기 전 재의결 추진 방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당초 8~11일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거부권을 조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국민통합위 “또래갈등, 사법 의존도 낮춰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단순 또래갈등, 학교 현장서 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친화적 또래갈등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사법 의존도를 낮춰갈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또래간 경미한 다툼마저 처벌과 불이익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폭위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 절차·기준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안건 의결

증인·참고인에 김건희 여사 등 포함  
與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 해당  
청원 통한 탄핵, 원천적으로 불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규택(왼쪽),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백태홍 기자

## 與, 김영란법 식사비·농축수산물 상향 요청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최대 30만원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에 따랐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 청렴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요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서 “20만~30만원 사이 적정 수준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정부가 판단해주십사 범위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백태홍 기자